

참고 문헌

- 도학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정보법학회 2012년 2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
-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

이숙연*

1. 들어가는 글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다기하며 더욱 막강한 파급력과 전파력을 가진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각종 정보들은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혹은 ‘표현의 자유의 장’이 아니라 ‘불법과 음란의 바다’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음란물과 폭력물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의 온라인게임과 이에 대한 과다몰입이 엉뚱하게도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또한 사회존립을 위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온라인 유통금지와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방지를 위한 각국의 입법과 실무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폭력적인 내용의 온라인게임으로부터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방

*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 고찰한다.

2. 음란물로부터의 아동 보호

미국

1)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미국은 통신법¹⁾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2월 개정 통신법을 시행했다. 통신법 개정으로 추가된 제5편(TITLE 5) '음란과 폭력(OBSCENITY AND VIOLENCE)'은 소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으로 명칭되었다. 동법 제223조(a)(1)(B)(ii)²⁾는, 통신장치를 이용해, 통신의 수령자가 18세 미만임을 알면서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언급·요청·제의·제안·이미지 또는 다른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³⁾에는 Title 18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과 자유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전자개인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등 20여 시민단체는 1996년 2월 8일 위 법률 223(a)와 (d)⁵⁾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constitutional challenge)을 제기했다.⁶⁾ 위 ACLU v. Reno 사건⁷⁾에서 위 연방지방법원은 3인의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했으며, 1996년 2월 15일 위 법률 중 '상스러운(indecent)' 및 '명백하게 무례한(patently offensive)'이라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 위 법률의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 order)을 내렸다. 위 법원은 "혼돈(chaos)이

인터넷의 강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강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자유로운 표현의 혼돈과 불협화음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의 상소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1997년 6월 26일 통신품위법의 문제의 규정들은 내용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에 해당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⁸⁾ 한편, 오크너 대법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별도 의견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과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구획을 나누는 법률(zoning law)은 그 법률에 의해 성인들이 그 표현물을 접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야만 유효하다고 했다.⁹⁾ 결국 통신품위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아동 온라인 보호법

ACLU v. Reno 사건에서 통신품위법이 위헌판결을 받자,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¹⁰⁾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Communication Decency Act II'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통신품위법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위 법률은 적용 대상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상의 통신 중 상업적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신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의 통신을 한 자를 징역 6개월이나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두었다.

ACLU는 COPA에 대해서도 위헌소송¹¹⁾을 제기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COPA는 외설적이지 않은 성적 표현에 대한 내용 규제로서 무효로 추정되고 이 법률에 대해 엄격한 심리가 필요하며, 원고들은 향후 승소 가능성과 (위 규정을 시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및 이익형량 부분을 소명했다"며 COPA의 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¹²⁾ 제3연방항소법원(Third

Circuit)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용했으나, 연방대법원은 COPA의 판단기준은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¹³⁾ 연방항소법원은 다시 COPA에 대한 심리를 해, 2003년 3월 22일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이 정당하다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¹⁴⁾ 법무부가 다시 상고하자,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9일 이번에는 COPA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인터넷콘텐츠공급자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 더 우세하다고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¹⁵⁾

이를 받은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영구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고, 제3연방항소법원이 다시 이를 인용했다.¹⁶⁾ 상고를 위한 법무부의 기록이송신청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COPA에 대한 위헌판결은 확정되고 그 위헌성에 대한 지루한 법정공방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아동 인터넷 보호법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이 법원의 연이은 위헌판결로 불가능해지자, 미국 의회는 2001년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¹⁷⁾ 제정을 추진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외설물,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모든 공립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컴퓨터에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¹⁸⁾

ACLU와 미국도서관연합회(ALA: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몇몇 공립도서관, 도서관 후원자, 인터넷정보제공자 등과 합동으로 아동 인터넷 보호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해 도서관에 위헌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02년 5월 "CIPA가 요구하는 필터링을 실제로 담당하게 될 소프트웨어는 현실적으로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외설물, 아동포르노물 및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매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도 걸러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렇게 과도하게 차단되는 정보 또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동 법률에 규정된 내용보다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03년 6월 23일 "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웹에 자신의 표현을 싣는 공표자의 표현을 권장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도서관은 웹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한 종류에 속하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¹⁹⁾

이에 따라 도서관 영역에서는 현재까지 CIPA에 의해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아동포르노방지법

미국은 아동포르노물(childpornography)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미국 헌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⁰⁾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하기 위해,²¹⁾ ①1977

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한 법률(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ct)', ②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③1986년 '아동의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률(Child Sexual Abuse and Pornography Act)'²²⁾, ④1988년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⑤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²³⁾, ⑥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을 각 제정하거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동포르노금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CPPA)은 컴퓨터나 다른 전자적 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를 수정해, 마치 어린이가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만든 시각적 묘사 등도 아동포르노물(childpornography)에 해당한다고 정의해 이를 처벌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아동포르노물을 고의로 우송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한다.²⁴⁾ 동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운송·취득·배포·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나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독일²⁵⁾

1)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차단·규제적 자율규제²⁶⁾

종래 별도로 유지되던 'TV방송에 관한 국가계약'(RSfV), '미디어서비스국가계약'(MDSfV), '텔레미디어상의 청소년 유해물과 매체물에 대한 법률'(GjSM) 중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이 2002년 9월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계약'(JMSfV)으로 통합되었다. 위 국가계약 제16조 소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KJM)가 공인한, 기존의 미디어서비스제공자들의 자율통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inrichtungen der Medienanbieter: FSM)의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포르노, 극단론적 선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물에 대해 규제된 자율규제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유해물에 대한 등급판정은 정부기관인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에서 하며, 사업자의 성인물 유통 시 미성년자에 대한 '기술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자율규제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통제기구(FSM)'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송국과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공인된 자율통제기구에 매체물을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므로, 매체물이 유해하지 않다는 자율통제기구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독일 연방정부는 1990년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해 통일적인 입법을 시도했으나, 연방과 주 사이의 입법권에 대한 다툼 때문에 불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방과 주는 고유의 입법권한에 따라 거의 같은 시기에 각 정보통신서비스법(TDG)과 미디어서비스국가계약(MDSfV)을 각기 제정했다.²⁷⁾ 그런데, 위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텔레서비스(Teledienst)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는 그 구별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연방과 주는 기존의 미디어 관련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토대를 다시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디어의 유포 기술이 아니라, 내용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춰 시도되었고, 2007년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es: TMG)으로 통합되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기관으로 정부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 심사청(BPJM), 주(州)미디어 감독청(DLM)과 민간기구인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가 있으며, 참고할 관련 법으로 구 정보통신서비스법(InfKDg)(1997), 구 전자통신서비스법(TDG)(1997), 형법(음란물, 선동물, 폭력물 등 규제)(1997), 청소년 유해문서 및

미디어내용배포 법률(1997), 청소년보호법(JuSchG)(2002),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MSv) 등이 있다.

2) 정보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 척결을 위한 법률²⁹⁾

독일 연방하원은 2009년 6월 18일 특별법의 형태로 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 척결을 위한 법률'을 의결했고,²⁹⁾ 이 법률은 2010년 2월 22일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률'(줄여서 '접근차단법'이라고도 함)의 제정³⁰⁾과 전기통신법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정치적·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의회를 통과한 후 무려 6개월이 넘어서야 비로소 연방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아동포르노의 유포로 장시간 피해를 입게 될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주로 인터넷접속제공자)들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비밀리에 작성한 차단목록에 들어 있는 특정 아동포르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를 진다.

해당 웹사이트는 도메인네임, IP주소 및 URL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차단이 이루어지며, ISP는 라우터, 이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프락시 서버 또는 이들의 도메인 서버에서 선택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차단 인프라를 구축해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하이브리드 차단기술³¹⁾도 고려되었다.

이 법률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발효 후 2년 이내에 전문가위원회의 경험을 고려해 연방정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2월 22일 이 법률이 예방적 검열을 허용해 독일 기본법 제5조의 검열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

원이 제기되었고 2011년 3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³²⁾ 하지만 연방의회에서는 동 법률에 대한 논쟁이 지속됨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기도 전인 2011년 12월 29일 이를 폐지하고 말았다.

3) 형법 제184조³³⁾

독일 형법 제184조 제3항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중한 포르노그래피'로 보아 그 반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184조는 포르노그래피의 매체를 '문서(Schrift)'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1조 제3항이 문서의 개념을 확장해 녹음, 영상기록, 전자기록, 도화 및 기타의 표현물을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음란물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제184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의 반포행위(제1호), 공공연한 전시·제시·상영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제2호),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조·취득·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3호)이다.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반포에 해당된다. 다만, 행위자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집단에 제공한 경우에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효율적인 적발 및 규제를 위해 수사기법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주경찰들은 서로간의 정보감순찰(Netzpatrouille) 기능을 강화해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주의 경찰들이 수집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검색 및 혐의자 주거에 대한 수색에도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9월 아동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검색활동에서 독일 Sachsen-

Anhalt 주경찰의 주도하에 독일 내에서만 500가구를 수색하고, 166개국에서 2만6500명의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83개 아동포르노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

1) 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각 해당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광고선전물,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된 이래 수차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2011년 9월 15일 전문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 즉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또는 ⑥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위 기

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11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방안으로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등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스스로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해 동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도록 규정해, 매체물 제작자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제13조), 또 포장해야 하는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해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제14조).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제17조). 또한 방송시간이나 광고선전이 제한되기도 한다(제18, 19조).

청소년보호법이 2011년 9월 15일 전문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통신망³⁴⁾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①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②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제23조). 정보 공표 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나, 위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거명령(제44조 제1항)에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5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포장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시간 제한을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제59조).

청소년보호법이 자율규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배포 및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3일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문이 개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소관부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제8조 제1, 2, 4항).

초기의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또는 전시·상영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2007년 8월 3일 법률 개정(법률 제8634호)에 의해 단순 소지행위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제5항).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11년 9월 15일 법률 개정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벌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2년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부칙 제1조 후단).

동법 시행령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①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②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 3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므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게임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을 온라인게임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는 내용규제와 접속규제로 나눌 수 있다. 내용규제로는 등급분류에 따라 접근 가능한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과 특정한 내용(폭력적, 선정적)의 게임의 청소년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후자에 형사벌이 결합될 때 위헌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아래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접속규제로는 일정시간(주로 심야시간)을 정해 강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 게임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부터 강제접속차단, 소위 섯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급분류의 주체도 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지, 정부가 설립한 기구인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의하되, 매체물 제작자가 스스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거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미국

미국은 민간기구인 ‘오락소프트웨어 등급심의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를 통해 유해오락물을 통제하고 있다. ESRB는 1994년 오락소프트웨어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율규제기구다. ESRB는 컴퓨터와 비디오게임 콘텐츠의 등급을 매기고, 업계에 도입된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³⁵⁾ 등급은 폭력성과 선정성을 감안해 3세 이상 어린이용(EC)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E), 10세 이상(E10+), 청소년(T), 17세 이상(M), 성인 전용(AO, 18세 이상), 등급 보류(RP)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세분화하고 있다. ESRB의 등급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³⁶⁾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Leland Yee는 폭력적인 게임과 아동들의

공격적인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믿고, ESRB의 자율등급시스템을 규율하고자 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의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의 ESRB 등급에 더해 명백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AB1179³⁷⁾를 통과시켰다. 위 법률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ESA와 EMA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³⁸⁾는 그 전에 “위 법률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위 법률의 위헌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12월경 법률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얻어냈다.³⁹⁾ 연방지방법원은 2007년 8월 6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2009년 2월 20일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⁴⁰⁾

다른 주에서도 같은 법률이 제정된 적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ESA 등 비디오게임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하급심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기록이송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6월 27일 7대2로 위 법률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비디오게임도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표현물이고, 표현에 관한 정부의 내용규제 금지의 예외는 제한되지만, 외설·선동이나 전투언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영역에 추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⁴¹⁾

독일

독일은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규제적 자율규제기구를 운영하

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법’(JuSchG)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감독관청인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원’(BPfM)⁴²⁾을 설치·운영해 관련 자율기구의 결정이 법적인 허용범위를 넘었을 경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은 감독권 행사의 차원에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효과와 맞먹는 인증 및 인증철회권과 취소권 및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정된 제재조치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의제기와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⁴³⁾

‘게임프로그램 자율규제기관’(USK)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조직 및 운영이 의무화된 게임프로그램의 민간업체들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위 기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온라인게임의 연령제한등급 설정(0, 6, 12, 16, 18세 구분), 게임프로그램에 비속어 사용의 제한,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 등 불법 및 유해정보의 유통에 있어 관련 표현을 걸러 낼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및 금지어 기능강화를 할 수 있고, 강한 의심이 되는 특정영역에 있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⁴⁴⁾

우리나라

2011년 5월 19일 신설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제1항⁴⁵⁾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 대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소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차단방식을 두고 여성가족부는 적용시간에 대해 일괄적인 차단을 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시간 이후의 신규접속만을 차단할 것을 주장

했고, 적용대상 연령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문화체육관광부는 '14세 미만'을 주장했다. 연령제한 규정을 어느 법률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두며 '일괄적 접속차단(신체벨라 섯다운제)'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적용대상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타협이 되었다. 위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생활지도 문제를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⁴⁶⁾ 게임물의 내용과 무관한 일괄적 접속차단은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자율규제가 아닌 일률적인 타율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온라인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관련 온라인게임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amusement 산업협회' 등의 자율기구가 있고 강제적인 접속차단이나 게임피로도 시행 등의 내용도 있으나 위반의 경우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정책 협의도 없고,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요청만이 존재할 뿐이다.

관련 업계 중심의 규제적 자율기구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조직참여를 하게 한 후 이들 단체에 온라인게임 운영 전반에 대해 우선적인 실행 및 통제권을 주되 자체적인 규제권 인정 및 국가의 실효성 있는 형사벌과 행정벌을 포함한 사후감독권 행사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⁴⁷⁾

4. 결론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 규제적 자율규제로 충분인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규제를 통한 보호에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계가 존재하며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지루한 공방 과정에서 되레 청소년보호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법적 규제 방식은 금지의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지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을 수반할 수 있다. 법적·기술적 규제 방식은 게임 섯다운제에서 보듯 간명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또는 상충하는 기본권과의 형량 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 척결을 위한 법률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보호와 관련해 규제적 자율규제 방식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자율기구인 ESRB의 등급분류만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적 비디오게임의 제공을 방지할 수 없고, 업체로 구성된 단체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나 성인에게는 보장되어야 할 표현물의 섬세한 맞춤형 구획 획정(narrow tailoring)을 위한 동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특수성과 목적,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업무는 민간 업계의 규제적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도, 정부기구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방향을 설정하며 이에 따른 법적 규제나 의무적 규제를 병행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1) 1934년 제정된 Telecommunications Act를 말한다.
- 2) 위헌판결을 받은 구 CDA 조문 http://epic.org/free_speech/cda/cda.html
- 3) §223. Obscene or harassing telephone call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 (a) Whoever--
 -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 ... (B)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
 - ...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indecent, know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under 18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 (d) Whoever--
 -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knowingly--
 - ... (B) uses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display in a manner available to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that, in context, depicts or describes, in terms patently offensive 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 regardless of whether the user of such service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or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 4) 김문환, “인터넷에서의 아동의 보호”,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2002, 1.

- 5) “
- 6) 한편, 위 시민단체들도 음란물과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측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문환, 전 계 논문
- 7) 929 F. Supp. 824 E. D. Pa. 1996
- 8) Reno v. ACLU, 521 U.S. 844, 117 S.Ct. 2329
- 9) 오큰너 대법관은, 위와 같은 zoning law가 성인의 해당 표현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을 받거나, 청소년들에게 해당 표현물을 향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물리적인 구획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재 단계에서는 구획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CDA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라는 주제 전 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 10) 47 U.S.C. §231
- §231 Restriction of access by minors to materials commercially distributed by means of world wide web that are harmful to minors
 - (a) Requirement to restrict access
 - (1) Prohibited conduct

Whoever knowing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akes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s available to any minor and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6 months, or both.
- 11) ACLU v. Reno, 31 F. Supp. 2d 473 (E.D. Pa.,1999).
- 12) ACLU v. Reno, 31 F. Supp. 2d at 477.
- 13) Ashcroft v. ACLU, 122 S.Ct. 1700. 자세한 내용은 이 책 II.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정책추이 개관, 서보국 교수 집필 부분을 참조.
- 14) ACLU v. Ashcroft, 322 F.3d 240.
- 15) 542 U.S. 656, 124 S.Ct. 2783 이번에도 대법관 9명 중 4명(Scalia, Breyer, Rehnquist, O'connor)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다수 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

도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COPA에 대한 위헌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아동에 대한 보호가 계속 지연되는 점을 아쉬워했다.

- 16) 534 F.3d 181 C.A.3 (Pa.), 2008.
- 17) Pub. L. No. 106-554, §§ 1712, 1721, 114 Stat. 2763 (2000).
- 18) 47 U.S.C. § 254(h)(5)(C)(i) (2000).
- 19) 539 U.S. 194, 123 S.Ct. 2297 U.S.Pa., 2003. CIPA는 6:3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 20) 연방대법원의 *Osborne v. Ohio* 495 U. S. 103(1990) 사건 참조. 김문환, “인터넷에서의 아동의 보호”,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890면에서 재인용
- 21) 이건호,
- 22)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
- 23)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광고나 시각적 묘사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행위 범죄화
- 24) Ian C. Ballon, *E-Commerce and Internet Law*, Vol.3, 2001, p.46-7.
- 25) 박희영,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 (순간)『법제』 627호 (2010. 3.) 법제처, 7면
- 26) 이에 대해서는 이 책 II. 서보국 집필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 27)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인터넷 法律』 통권 제35호 (2006.05) 법무부
- 28) 박희영, “독일의 아동포르노 사이트의 차단 법률”, 『법제』, 627호(2010.3.) 법제처.
- 29) 독일 연방청소년가정보건부 장관인 라이엔(von der Leyen)의 최초 제의로 2009년 1월 13일 연방정부와 독일의 중요 인터넷 접속제공자 사이에 인터넷상에서 아동포르노 내용을 차단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9년 4월 17일 독일의 중요 5대 접속제공자들은 연방범죄수사청과 ‘접속제공자들이 연방범죄수사청이 작성한 차단목록을 기초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에 침입해 인터넷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회의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는 2009년 5월 5일 ‘정보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 척결을 위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은 텔레미디어법(TMG)을

개정해 인터넷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텔레미디어법을 개정하려던 원래 초안과는 달리 특별법의 형태가 되었다. 박희영, 전계 논문에서 인용.

- 30) Gesetz zur Erschwerung des Zugangs zu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en in Kommunikationsnetzen, Zugangserschwerungsgesetz (ZugErschwG, BR-Drs. 604/09)
- 31) 라우트와 프락시를 결합해 차단이 행해지는 하이브리드 차단기술, 박희영, 전계 논문에서 재인용.
- 32) BVerfG, v. 29. 3. 2011, 1 BvR 508/11.
- 33) 원혜숙,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2004.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함.
- 35) <http://www.esrb.org/>
- 36) 위 ESRB 홈페이지 및
- 37) 위 법률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대해 두 부분의 정의를 담고 있다.
 - (d) (1) “Violent video game” means a video game in which the range of options available to a player includes killing, maiming, dismembering, or sexually assaulting an image of a human being, if those acts are depicted in the game in a manner that does either of the following:
 - (A) Comes within all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 (i) A reasonable person, considering the game as a whole, would find appeals to a deviant or morbid interest of minors.
 - (ii) It is patently offensive to prevailing standards in the community as to what is suitable for minors.
 - (iii) It causes the game, as a whole, to lack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 (B) Enables the player to virtually inflict serious injury upon images of human beings or characters with substantially human characteristics in a manner which is especially heinous, cruel, or depraved in that it involves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to the victim.
 - (2)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 (A) "Cruel" means that the player intends to virtually inflict a high degree of pain by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in addition to killing the victim.
- (B) "Depraved" means that the player relishes the virtual killing or show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 as evidenced by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 (C) "Heinous" means shockingly atrocious. For the killing depicted in a video game to be heinous, it must involve additional acts of torture or seriou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as set apart from other killings.
- (D) "Serious physical abuse" means a significant or considerable amount of injury or damage to the victim's body which involves a substantial risk of death, unconsciousness, extreme physical pain, substantial disfigurement, or substantial impairment of the function of a bodily member, organ, or mental faculty. Serious physical abuse, unlike torture, does not require that the victim be conscious of the abuse at the time it is inflicted. However, the player must specifically intend the abuse apart from the killing.
- (E) "Torture" includes mental as well as physical abuse of the victim. In either case, the virtual victim must be conscious of the abuse at the time it is inflicted; and the player must specifically intend to virtually inflict severe mental or physical pain or suffering upon the victim, apart from killing the victim.
- (3) Pertine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killing depicted in a video game is especially heinous, cruel, or depraved include infliction of gratuitous violence upon the victim beyond that necessary to commit the killing, needless mutilation of the victim's body, and helplessness of the victim.
- 38) 당시 명칭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SDA)
- 39) Video Software Dealers Ass'n. v. Schwarzenegger Not Reported in F.Supp.2d, 2007 WL 2261546 N.D.Cal.,2007.
- 40) 556 F.3d 950 C.A.9 (Cal.),2009.

- 4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변경됨에 따라 당사자명이 변경되었다. Edmund G. BROWN, Jr., Governor of California, et al., Petitioners,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et al. No. 08–1448.
- 42) BPjM(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원)은 독일연방의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조직상으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 및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소속되어 있다. 각 주(州)의 청소년청은 위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 43) 임규철, "온라인게임 과다 의존증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과 개선방안".
- 44) 임규철, 전제 논문.
- 45)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2. 7. 26. 시행된다.
- 46) 임규철, 전제논문
- 47) 임규철, 전제논문

참고 문헌

도학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정보법학회 2012년 2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

제6장

인터넷은 혁신적 비즈니스 플랫폼